

이라크 현지 조사 보고

박건영(가톨릭대학교)

1. 목적

- 이라크 현지조사활동의 목적이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·현장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, 본 보고서의 목적은 파병 여부에 관한 보고자의 의견 개진보다는 정책결정 각 과정에서 숙고되어야 하는 문제 및 정책결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도전과 대처방법 등을 제시하는 데 있음.

2. 문제 제기

- 주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구하고 있음.
 - 열악한 생활조건하의 이라크 주둔 미군의 회전(rotation) 필요성.
 - 이라크 반미세력의 저항을 줄이고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미군 주도 작전을 다국적 동맹군의 작전으로 전환할 필요성.
 - 이라크 전쟁 및 전후처리 과정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미국의 필요성.
- 한국 정부는 명분과 실리간 충돌, 국내적 합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고 있음.
- 아래에서는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책결정 과정과 이후에 숙고되어야 할 사항과 다각적 분석 및 대처방안을 제시함.

3. 정책결정 과정에서 숙고되어야 할 사항과 시사결과

○ 이라크전의 정당성 결핍이 갖는 함의

- 이라크전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무시한 침략전쟁이라는 국내외적 비판을 받고 있음.
- 나아가 부시 정부의 명분은 핵프로그램 제거였으나 전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미국내에서도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음.
- 따라서 추가파병시 한국(또는 정부)이 "부당한 힘"의 사용을 지지하는 부도덕한 주체로 규정될 가능성 있음.

○ 미국의 대북정책

- 파병은 핵 비보유국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한국이 추인하는 꼴이 되어 핵보유를 선언했다고 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이를 반대할 명분 약화.

○ 이라크 지역의 안전 문제

- 지역적 인종적 종교적 분포에 따른 큰 편차 있는 바, 조사단이 방문한 지역을 기준으로 안전여부를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.
 - 안전위협 최고: 바그다드
 - 안전위협 중간: 모술(미국 101st 공정사단 지역), 알힐라(폴란드군 지역)
 - * 단, 모술에서 상인들과 면담한 바, 이들은 치안상황이 전쟁 전보다 악화하였다고 말하였음.
 - 안전위협 최저: 낫시리아(이태리군 지역)
- 바그다드를 제외하고 모술 및 낫시리아 지역에서는 심각한 안전위협이 예상되지 않음.
 - * 단, 이라크인에 대한 조사단의 접근이 본원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

○ 한미동맹

- 부시 정부는 한국군의 파병 여부를 한미동맹의 미래와 연관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 - 그러나 부시 정부와 미국을 구분할 필요성도 지적될 수 있으며,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한미동맹을 임의로 후퇴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음 (부시 정부내 강경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 아님).
- 이번 파병결정이 한국은 “모든”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.

○ 한국의 상업적 이익 및 비용

- 파병시 이라크 재건과 관련한 제반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가 보다 용이할 수 있음 (케네디 대사는 모든 나라 모든 기업에게 기회가 열려있다고 발언했음).
- 이라크 파병 관련 비용은 우리 기업이나 상인, 군인들에게 환급되어 일종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음.
- 불파병시 상당한 현금 부담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상업적 이익은 파병시 유리하게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.

○ 국제사회의 인식

- 상기한 바와 같이, 이라크 전의 정당성과 관련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이 예상될 뿐 아니라, 미국인 상당부분도 한국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 있음 (6월초 한반도평화협의회 방미보고 참고).

4. 파병 결정시 고려사항과 대처방법

○ 정치적 명분 강화 방안

- 유엔 결의가 중요하지만, 한국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정권(부시)과 국가(미국)를 구분하여 국민을 직접대표하는 미국 의회 양당 지도자들이 방한 및 파병요청하는 방법이 분별력있는 과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임.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미 의회의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정당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임.

○ 지역

- 북부(모술) 유전 지역이 안전,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최적지역임.
- 미군도 이를 선호하고 기정사실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음.
- 파병전 우리 정부는 이 지역 KADEK (미 국무부에 의해 테러집단으로 규정됨) 소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미국 정부의 협정체결시 명문화하여 혼선이나 오인을 피해야 할 것임

○ 시간

미 101st 사단이 2월말 또는 3월초 귀국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시간표에 맞춰 병력이 전개되도록 배려할 필요성 있음.

○ 파병군의 구조

- 치안확보와 민사작전이 주 임무이므로 이에 적합한 병력구조가 필수적임.
- 이라크 경찰력 회복 지원의 임무와 시위진압 및 이탈리아군 부대방호를 추가적 임무로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카나미니에리에 주목할 필요 있음.
- 이는 이라크인에 의한 치안유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.

- 따라서 파병군은 한국의 헌병대, 전투경찰, 행정병, 그리고 부대방호를 위한 무력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○ 파병군의 규모

- 자율적 작전통제가 가능한 플란드 사단의 형식과 규모가 바람직함.

중심 31200

○ 대내외 설명

- 전후 처리라는 이미지를 줄이고, 이라크 재건 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분 부각시킬 필요성.
- 상업적 이익을 강조하며 "추한 한국인"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임.

5. 불파병 결정시 고려사항과 대처방법

○ 국내 정치·경제 불안 증가 가능성

-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국투자자들에게 대한 적극적 설명회 개최 및 인센티브 제공.

○ 주한미군 조기 감축 또는 재배치 가능성

- 그러나 루시 정부가 주한미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라크로 이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.
- CJTF-7의 000 대령은 한국 불파병 결정시 이탈리아 주둔 미군과 National Guard를 이라크 북부로 이동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음. (그러나 이는 미군병력 rotation에 문제를 야기할 것임).
- 외교·국방담당 고위관리 및 국회 주요 인사들의 미국 파견 및 이해 증진 노력.

○ 6자회담

- 부시 정부의 강경선회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, "과월 노선"이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함.
- 우리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해 불파병을 명분으로 북한 및 중국의 협력적 자세를 적극적으로 촉구해나갈 필요성.

○ 대내외 설명

- 특정 대상(국)을 비판하기보다는 북핵 및 한반도 긴장 상태에서 해외파병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는 "보수주의자들"의 한반도안보 논리를 부각시킬 필요성.

Handwritten notes in Korean, possibly a summary or key points related to the meeting.

Extensive handwritten notes in Korean, including some underlined phrases and a large bracketed section.

